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1차 통과... 29일 2명 압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탈락 순위·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다음달 3일 최종 후보 확정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재편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무난히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 양상을 보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선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1차 경선은 21~22일 이틀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이 진행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식'을 적용,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국한했다.

경선 결과는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개표와 집계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2차 경선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정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22일 1차 경선 여론조사 마감 후 막판 득표전에 총력을 쏟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에 출연,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2차 경선이 탄핵 찬반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탄핵소추 찬성파' 주자군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포석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민주주의 의회 폭거로 되는 일이 없었고 또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협력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간섭거리니까 대통령으로서 돌파구가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경선 토론에서 한 후보를 향해 '키높이 구두' 등 외모 관련 질문을 했던 홍 후보는 "국민이 쉬쉬하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것을 봉인 해제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받아냈고 나서는 것이다. 숨기는 것 없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탄핵소추 반대파' 후보들을 싸잡아 저격했다. 안정적인 4강 진출을 위해 본인과 대척점에서 서 있는 주자들을 흔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고 또 이번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모두 "범죄 혐의자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례적 회부 당일 회의... 대선 전 결론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사건이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회부 당일 회의를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어 따라 대선전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지만,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총 13명이 참여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은 제외된다.

대법원 상고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해 심리한다.

통상 대법원 사건은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이 검토에 들어가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게 된다. 주심 대법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합의에 나선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심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후보자의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6:3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조직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중전 대법원 판례 변경시,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사건의 중요성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관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심정을 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 "한미 통상협약, 새 정부에 권한 넘겨야"

최상목·안덕근 장관, 미국서 '2+2 협의'...박찬대 "결론 내려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한미 고위급 통상협약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담당하고 중대 있게 협상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에서 미국과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 정부(인사들은) 40여일 후 들어서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며 "문제는 한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들 다 공개해 버린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총리와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윈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한 총리와 최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선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꼭 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실질적 효과를 보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윤석열 정권 3년간 파탄 난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대폭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소비 진작 위해 추경 대폭 증액"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

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사업 예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용자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온누리상품권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자체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3조원을 제안했었다.

허 의원은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하는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 헬기를 포함한 진화 장비 관련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위한 예산도 증액해야 하고, 농업 지원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